

“지금 이 골든타임...대선 최우선 국정과제 선정 약속 받아야”

지방소멸시대, 그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에서의 자구노력 역시 한계에 도달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서서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이 같은 위기 속에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구지방분권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주제로 지역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하세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맡았으며,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대현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이상현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이 참여한 토론을 이끌었다.

광주일보-매일신문 '지방분권 헌법개정' 토론회

-이민원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으로 이미 지방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분권 개혁에도 함께 노력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만들어진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광주에서 토론회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라 마련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주도해 지방분권 개혁을 제안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 교수님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토론회 참석자**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하세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 ▲김대현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 ▲이상현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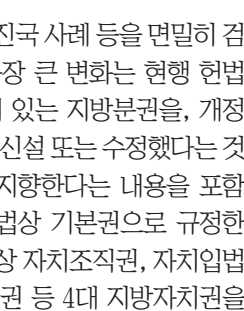
지방 주도한 개헌안 이번이 처음 주민자치권, 헌법상 기본권 규정 연방제 지향 참의원 민의원 분리 국회 양원제 재편 지방 의견 반영

▲하세현 경북대 교수(이하 하 교수)=이번 개헌안은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산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11월 초 격론 끝에 완성했습니다. 9명의 위원들이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서 나온 의견들과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 선진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행 헌법 117조, 118조에만 언급돼 있는 지방분권을, 개정안에서는 5개장 14개조로 신설 또는 수정했다는 것이고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민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헌법상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재편해 입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참의원과 기존의 국민 대표의 민의원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자치법원 설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만이 아니라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자치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입법·행정·사법 자치권을 갖는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지방의견 수렴 권력구조개편 개헌은 어렵게 지자체장 등 선출 자치법률로 지방이익 대변하는 개헌 돼야

-이 전 위원장=알았습니.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보죠. 우선 최백영 위원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 교수=사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보다 지방분권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했는데요. 실망감이 큼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별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백영 위원=강산이 세 번이 변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2할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현 정부에 기대가 컸지만, 이를 저버렸으며, 다만 최근 32년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지방자치에는 여전히 역부족이



지난 14일 오후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대구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민원(가운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며, 결국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시도 또한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주도해서 개헌안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반드시 정치권으로부터 지방분권을 약속받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전 위원장=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천입니다. 광주와 대구, 각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은 김대현 부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현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실 내용적 측면에서 연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합니다.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기 보다는 연방제를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라고 강조했으면 합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인해 개헌이 너무도 힘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행 헌법 조항 가운데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논의구조를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어렵게 하고 장기간 논의하게 하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자치라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며,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 사법자치 등 4개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또 주민자치권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위원장=헌법 개정을 경성과 연성으로 나눠서 하자는 것은 참신한 의견입니다. 연방제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과 자치법률이, 참의원과 민의원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의 차례입니다.



▲이상현 위원=동일한 법 체계에 있을 때 법률이 자치법률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방법과 주법과 같은 이치입니다. 20대 국회 개선관련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이 보여주듯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개헌의 핵심입니다. 개헌안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을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안을 광역자치단체 대구가 마련한 것은 상당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개정안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 주민도 주체로 포함하고, 참의원과 민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 법관의 임명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비롯해 2018년도와 그 이전 이후에 나온 모든 개헌안은 좌초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라는 바다 가운데 출항해 여전히 항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언제나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현행 헌법을 개헌한 지 35년이 됩니다. 이번 논의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 전 위원장=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하신 하 교수님의 답변이 좀 필요했습니다.

▲하 교수=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오랜 기간 중앙집권국가였으며, 중앙정부의 결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누어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위가 서야하며, 지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함부로 결정하도록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선례를 참조했고요. 지역대표형 상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부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의 선출법식도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되도록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 민의원, 참의원의 수를 대폭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 교수=본질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 대부분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 속에 국회의원의 수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개헌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 개혁은 말 그대로 지방을 위한 분권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중앙집권으로 인해 수도권만이 모든 것을 누렸으며,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소멸은 조만간의 수도권 소멸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이 잘사는 국가를 위해 이번 논의가 계속 더 발전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윤형석 기자 chadol@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